

민간투자프로그램(PPIF)

Public Private Investment Program 미국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연하는 투자펀드를 통해 은행의 부실자산을 최대 1조달러까지 매입하는 프로그램. 2009년 3월 금융기관 부실자산을 정리하기 위한 계획의 하나로 발표했다. 1차적으로 5000억 달러선에서 조성한 이후 최대 1조 달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재무부가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잔여분 중 750억~1000억 달러를 PPIF에 출연하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민간투자자들의 은행 부실자산 매입을 위해 대출보증 및 담보대출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부가 제공하는 자금의 절반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감독하는 '부실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매입 프로그램'에, 나머지는 '부실 모기지 관련 증권 매입 프로그램'에 투입된다. '부실 모기지 매입 프로그램'은 FDIC가 매입 자금의 85%를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한다. 나머지 15%는 재무부와 민간 투자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FDIC는 부실자산 경쟁입찰을 통해 민간 투자자를 선정한다. '부실 모기지 관련 증권 매입 프로그램'은 재무부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기존에 설정한 기간자산담보증권대출창구(TALF)를 통해 사들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초 오토론, 학자금과 신용카드 대출, 중소기업 대출 관련 AAA등급 증권에만 한정됐던 TALF의 매입증권 범위를 주택이나 상업용 모기지 AAA등급 증권으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와 민간 투자자들이 똑같은 금액씩 투자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금자리주택

정부가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짓는 분양주택으로 분양가가 기존 공공 주택 내 분양가 상한제 가격보다 15% 이상 싸다. 10년 임대, 20년 장기전세, 30년 이상 장기임대로 나뉜다. 국토부는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을 수도권 100만 가구를 포함해 총 15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70만 가구는 중소형 분양 주택으로, 80만 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건설된다. 수요자들이 입주시기와 분양가, 입지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사전예약제를 도입해 청약에 받을 예정이다.

위치기반서비스(LBS)

Location-based service 위치기반서비스는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획득된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에게 다양한 콘텐츠 및 온라인, 오프라인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서비스의 영역은 이동통신사업자의 GPS 휴대폰 서비스, 카드사의 위치기반 본인 확인 safe 카드, 택배업자의 화물추적, 최적배차서비스 등 한정된 분야에서 긴급구조·구난, 교통안내, 물류관리, 미아·도난 차량 추적, 경호서비스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하다.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어떤 충격이 가해졌을때, 즉 경제여건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가정 아래 은행들이 충분한 자본과 유동성으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예컨대 국내총생산(GDP)이 올해 2% 감소하고 실업률이 8.4%에 달하며 주택가격이 14% 하락한다는 기본 시나리오와, GDP가 3.3% 떨어지고 실업률은 8.9%로 오르며 주택가격이 22% 폭락한다는 위험 시나리오 등을 가정해 금융회사들이 전체 대출금과 보유 유가증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정손실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미국정부에서 2009년 2월 25일부터 4월말까지 자산 1천억달러 이상인 대형 은행 19곳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대형 은행들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을 확충하거나 아니면 정부의 공적자금을 수혈받는 것 가운데 하나를 택해 재무건전성을 높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자본확충이 필요할 경우에는 6개월내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위기대처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에 민간자본 유치에 실패할 경우 공적자금이 투입된다. 공적자금이 투입이 필요한 은행의 경우에는 해당은행으로부터 보통주로 전환가능한 우선주를 취득할 계획이다. 이러한 우선주는 은행의 요청이 있거나 혹은 7년이 경과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통주로 전환가능하다. 정부는 우선주를 시가보다 10% 할인된 가격으로 취득하며 9%의 배당금을 받게된다

탄소나노튜브(CNT (carbon nano tube))

탄소나노튜브는 벌집모양의 길다란 탄소구조물이다. 원통지름이 수십 나노미터(nm는 10억분의 1m)에 불과하다. 탄소나노튜브는 탄소 6개로 이뤄진 육각형들이 서로 연결돼 관 모양을 형성하고 있다. 구리와 전기전도도가 비슷하고 열전도율은 다이아몬드와 같다.강도는 강철보다 1백배나 우수하다. 지난 91년 일본 NEC의 이지마 수미오 박사가 탄소의 구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했다. 탄소나노튜브는 지름이 머리카락 1만분의 1에 불과한 벌집모양의 길다란 관.전기적,기계적 특성이 우수해 차세대 반도체의 소재로 연구되고 있다. 탄소나노튜브로 반도체 표면을 긁거나 나노물질 잉크를 묻혀 회로를 그리면 반도체 크기를 줄일 수 있다.

환경마크 (환경라벨링)(Eco-labelling)

환경친화적 제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이 이런 제품을 개발토록 인센티브를 주기위해 마련한 제도. 제품의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하는 등 일정한 환경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해당 제품이 환경에 적합하다는 내용의 문구나 표지를 제품에 부착토록한다. 상품 종류도 인쇄용지, 컴퓨터, 팩스, 실내용 장식재, 의류, 가전제품, 자동차용품, 산업용품 등 다양하다. 이러한 환경마크제도는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환경위해적인 상품의 소비를 억제하려는 제도이나,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OECD의 권유로 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됐으며 우리나라를 비롯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등 40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